

ASAN REPORT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최강,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

Asan Report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최강,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은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이 갖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여론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최 강

최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다. 과거 외교안보연구원 소장으로 일했으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및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부장을 역임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1998년,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현안팀장, 국제군축연구실장,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저널 편집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 부장으로 일했다.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주 연구주제 및 전문분야는 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등이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 지 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 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 의 철

이의철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아산 데일리 폴’과 ‘아산 연례조사’ 등 여론조사 실무와 분석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론조사, 국내정치, 선거연구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위튼버그 대학교(Wittenberg University)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계경제연구원(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에서 연구원을 거쳤고, 코리아헤럴드와 중앙일보 등의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목차

요약	9
들어가며	12
한미 르네상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4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	14
국가관계 평가	17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9
한미동맹의 필요성	19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21
한미동맹 주요 이슈	23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25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 관계	29
동북아 정세와 안보협력: 미국과 중국	30
한국인의 주변 정세 인식과 한미관계	32
향후 국가 영향력 평가와 협력대상	34
한일 갈등과 미국의 역할	35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실망: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중국	37
나가며: 한미관계의 미래	39
부록1: 한미관계 주요 이슈	43
부록2: 조사개요	47

그림

〈그림 1〉	국가 호감도	15
〈그림 2〉	국가관계 평가: 협력상대 비율	18
〈그림 3〉	한미동맹의 필요성	20
〈그림 4〉	우리 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	22
〈그림 5〉	한미동맹 주요 이슈	24
〈그림 6〉	한미관계 인식별 통일 이후 한미동맹 필요성	27
〈그림 7〉	한국인의 강대국 인식	33

표

〈표 1〉	국가수장 호감도	17
〈표 2〉	통일 이후 한미동맹 입장별 우리 군의 역할 확대 지지	23
〈표 3〉	세대별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26
〈표 4〉	한미관계 인식별 한미 FTA 평가	28
〈표 5〉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	31
〈표 6〉	향후 국가 영향력 평가별 협력대상	34
〈표 7〉	미국 역할론 입장별 미국의 한일갈등 대응 평가	36
〈표 8〉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별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	37
〈표 9〉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별 협력관계 인식	38
〈표 10〉	미국의 중요 파트너 인식별 협력관계 강화 국가	39

요약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다방면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도 있다. 전작권 전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근래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중국 호감도가 평균 4점대,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가 ‘호감이 없다’에 가까운 2~3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0%대를 유지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이 50%대에 머문 것과 대조됐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은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93%의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한국인은 83%,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66%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활동과 해외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한국인 역시 각각 87%와 65%로 과반을 넘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높았지만, 한미 양국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65%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봤다.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본 한국인 사이에서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한미 FTA에서 미국이 더 이익을 봤다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미관계를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의 14%만이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것에 비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7%나 됐다. 또 한미관계를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 중 다수인 68%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한

반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본 응답자는 한미 FTA가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많은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한 점은 한미 동맹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 사이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치·경제부문 영향력 평가에서, 앞으로 중국이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인은 향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45%가 미국을, 39%가 중국을 꼽았다. 향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는 67%가 중국을, 22%가 미국을 선택했다.

주목할 점은 향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 중 43%가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미래에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본 응답자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같은 경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협력해야 할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상당수 한국인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협력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對) 아시아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한국인이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한미관계에까지 미칠 조짐이 보였다는 점이다. 한일 갈등에 있어 미국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본 한국인은 미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에 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긍정: 28%, 부정: 39%)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 비해, 미중간 갈등상황에서 중국(긍정: 24%, 부정: 41%)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였다.

또 미국이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본 응답자는 미국이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본 응답자에 비해, 한중 안보협력(한국: 28%, 일본: 38%)과 중

국과의 협력(한국: 21%, 일본: 42%)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일 갈등 조율에 있어 미국이 보인 태도에 실망한 일부 한국인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도 한일 갈등 조율에 실패하고, 일본에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모두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 지역 국가 간 군비경쟁 심화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수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불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다수의 한국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우리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주변국 정세에 따라 이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들어가며

한미 양국은 60년 이상 공고한 군사·안보협력을 이어오며, 가장 성공적인 동맹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평택 미군기지가 공사 중에 있다. 또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과 같이 평화유지와 재건 임무를 수행했고, 이러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군사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동맹은 안보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미국은 한국에 세 번째 규모의, 한국은 미국에 일곱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다. 2001년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2012년에는 240억 달러로 약 700% 늘었고, 미국도 같은 기간 1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대(對) 한국 투자가 250% 증가했다. 사회문화적 교류 역시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는 7만 2,000여 명의 한국 유학생이 있으며, 매년 약 13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70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다. 태평양을 두고 반대편에 위치한 두 국가가 국방과 경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 방위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¹

물론 한미관계에 부침이 없던 것은 아니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라, 또는 국내 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일시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 한국인의 대 미국인식은 세대, 이념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미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었던 사안도 적지 않다. 서울

1. 아산정책연구원, East-West Center (2014).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과 워싱턴의 대북정책 기조 차이, 주한미군 감축 및 주한 미군 범죄와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개정 문제, 미국의 해외 파병 요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항(비용분담 및 환경치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은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안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와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말로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인의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는 공고했다. 다만 몇 가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존재했고,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은 향후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게는 한국인의 동북아 정세변화 인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가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전망하거나, 미국의 동북아 내 역할에 실망한 한국인 사이에서 미국 대신에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중국을 향후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동북아 내 정세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당장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지만, 앞으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에 주는 함의는 크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대결구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한일 갈등 중재 등과 같은 동북아 내 역할에 소홀할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 내 영향력 유지에 힘쓰면서 한국인이 미국에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록 역내 역할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한미 르네상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00년대 한미관계는 몇 가지 사건과 함께 부침을 겪었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대표적 사건이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은 다시금 안정기를 맞이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전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한미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미 양국이 포괄적 동맹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부터 2014년 초까지의 최근 5년간 주변국 호감도 조사 결과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

먼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아산연례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를 살펴보자. 국가 호감도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0점(전혀 호감이 없다), 5점(보통이다), 10점(매우 호감이 있다)까지의 11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조사 결과, 미국 호감도는 2010년 5.85점에서 2011년 5.63점, 2012년에는 5.96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미국에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 일본, 북한 호감도가 하락 추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미국 호감도는 보통 이상인 5점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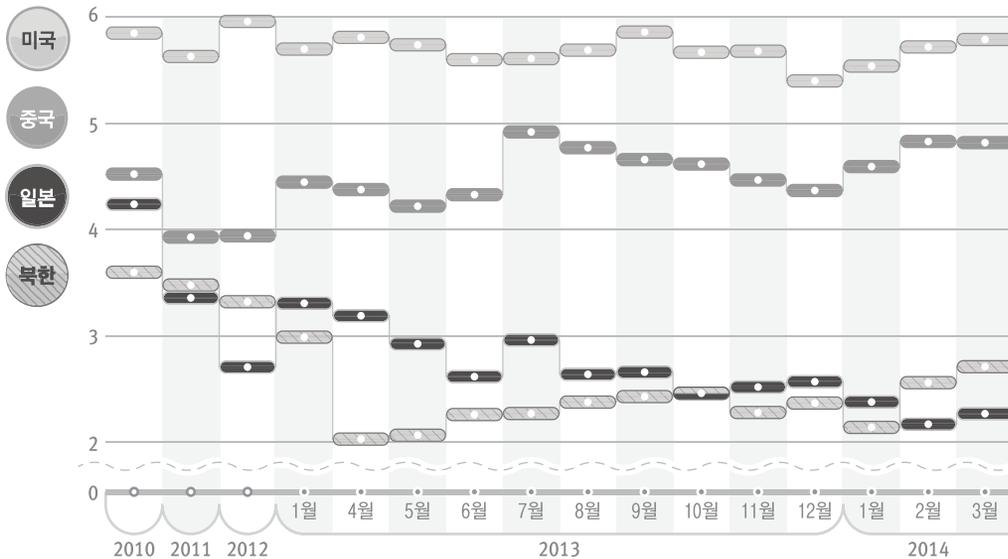
2013년부터는 매월 아산데일리폴을 통해 한국인의 주변국 호감도를 조사했다.² 같은

2.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 호감도와 국가관계 조사를 실시해 왔다. 2월과 3월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문항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보통(5점) 이상을 유지했다. 미국 호감도는 지난해 1월부터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높아진 8월까지 5점 중후반대를 기록하다, 9월부터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12월에는 연중 최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

연말 미국 호감도가 하락한 이유는 작년 10월 초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회의에서 미국의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11월 말 중국의 신설 방공식별구역(CADIZ) 설치에 따른 미중 갈등 양상이 격화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동북아에서 양대 열강의 충돌 조짐이 보이자 한국인들의 미국 호감도가 소폭 떨어진 것이다.

<그림 1> 국가 호감도 (단위: 0~10점, 11점 척도)³



3. 아산연례조사 2010, 2011, 2012,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3년 1월 3~5일, 3월 30일~4월 1일, 5월 2~4일, 6월 1~3일, 7월 1~3일, 8월 3~5일, 9월 2~4일, 10월 3~5일, 11월 2~4일, 12월 2~4일, 2014년 1월 1~3일, 2월 1~3일, 3월 1~3일).

이후 미국 호감도는 다시 상승했다. 2014년 3월에는 5.79점으로 올해 들어 미국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4.82점), 북한(2.71점), 일본(2.27점) 호감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4월 방한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감이 미국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호감도는 세대별로 일부 편차를 보였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3회의 미국 국가 호감도 조사 결과의 세대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20대 5.90점, 30대 5.18점, 40대 5.25점, 50대 5.73점, 60세 이상 6.53점이었다. 미국 호감도는 5060세대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30대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호감도의 세대 간 편차는 중국과 일본 호감도에서 발견된 세대별 편차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었다.⁴

〈표 1〉에 제시된 국가수장 호감도 조사 결과도 국가 호감도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가 조사 대상 국가수장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각국 국가수장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10점 만점(0~10점)에 6점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호감도가 높은 국가수장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으며, 일본 아베 총리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호감도 순위에서 최하위를 다투고 있었다.⁵

-
4. 2014년 3월 국가 호감도 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중국과 일본 호감도의 경우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사이에 1점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50대(5.60점)와 중국 호감도가 가장 낮았던 20대(4.07점)의 경우 1.53점의 차이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20대(3.24점)와 일본 호감도가 가장 낮은 60세 이상(1.33점)의 경우 1.91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그 편차가 1점에 미치지 못했다(0.70점).
 5.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였던 2013년 7월에 5.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소폭 하락하며 올 3월에는 4.78점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었다. 일본 아베 총리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의 경우 올 1월 ‘전혀 호감이 없다’인 0점에 매우 근접한 1점 이하의 호감도를 보였고, 3월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점 초반대에 머물렀다.

〈표 1〉 국가수장 호감도 (단위: 0~10점, 11점 척도)⁶

구분	2013년		2014년	
	7월	11월	1월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6.29	6.25	6.21	6.19
중국 시진핑 주석	5.35	5.31	4.55	4.78
러시아 푸틴 대통령	4.08	4.87	4.14	3.47
일본 아베 총리	1.65	1.43	0.99	1.11
북한 김정은 위원장	1.14	1.19	0.99	1.27

국가관계 평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더욱 긍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월 단위로 한미, 한중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해 협력관계인지, 또는 경쟁관계인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평균 80% 가량의 한국인이 미국을 우리나라의 협력상대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4월,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84.3%까지 올라간 후 꾸준히 80%대를 유지했다. 11월부터 소폭 하락하며 70%대로 떨어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된 올해 3월에는 다시 80%대를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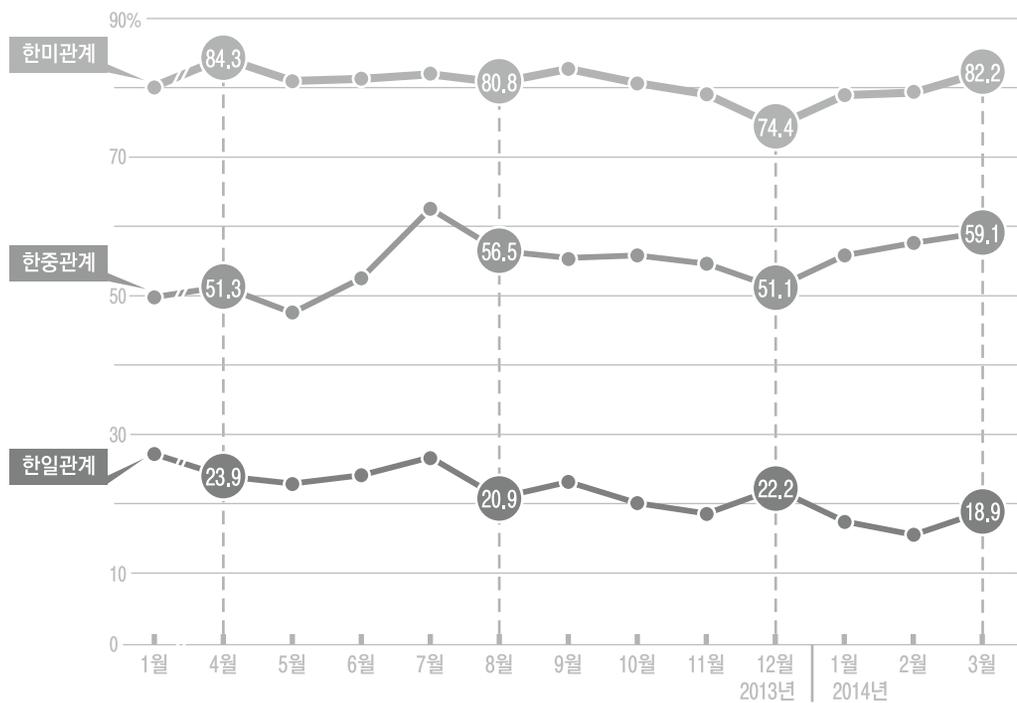
함께 조사한 한국인의 한중·한일관계 인식은 한미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국과 중국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라고 보는 시각은 대체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수치가 60%를 넘은 것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였던 지난해 7월 조사가 유일했다. 지난 1년간 한일관계를 협력관계로 본 한국인은 20%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였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인 대다수가 협력관계에 있다고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을

6. 아산데일리리플(조사기간: 2013년 7월 10~12일, 11월 17~19일, 2014년 1월 1~3일, 3월 1~3일).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높이 사면서도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팽창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를 보는 한국인의 시각은 대부분 역사문제와 결부되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국가관계 평가: 협력상대 비율⁷ (단위: %)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동북아 지역 주변국인 중국, 일본, 북한 등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뚜렷했다. 한국인은 여러 조사 결과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한미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요인들은 상존하고 있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7. 아산데일리포(조사기간: 2013년 1월 3일~5일, 3월 30일~4월 1일, 4월 29일~5월 1일, 6월 1일~3일, 7월 1일~3일, 8월 3일~5일, 9월 2일~4일, 10월 3일~5일, 11월 2일~4일, 12월 2일~4일, 2014년 1월 1일~3일, 2월 1일~3일, 3월 1일~3일).

속에서 미국과 중국 두 열강의 관계가 바뀔에 따라 두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한 이슈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14년 들어 지역 정세가 긴박하게 변하며 동북아 주요국은 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 갈등과 경쟁이 현재 진행형이고, 정세변화의 불확실성은 늘어났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안보협력이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역내 안보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증진시켜야 하는 난제에 마주하게 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와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요구를 높였지만,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현실화 될지 미지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은 자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미동맹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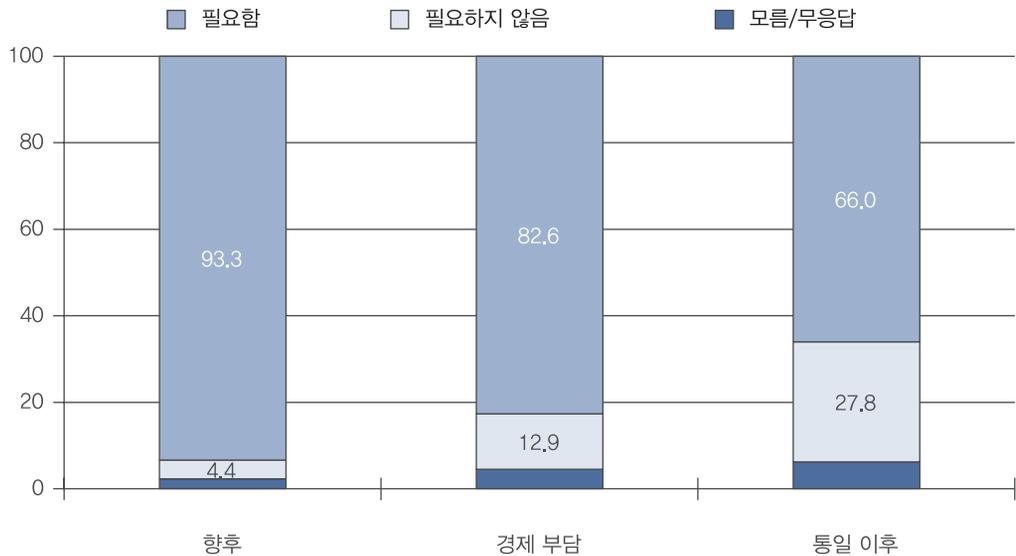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아산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 한국인은 2010년 87.2%에서 2013년 96.0%로 증가했다. 올 3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93.3%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절대다수의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경제적 부담이 늘거나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을 가정했을 때에도 한국인의 동맹에 대한 지지는 여전할까?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늘더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도 여전히 다수인 82.6%의 한국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한국인이 동맹에 있어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반

면,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묻자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6.0%까지 떨어졌다(<그림 3> 참조). 전체의 2/3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가장 큰 안보불안 요소인 북한이 사라지면 한미동맹이 필요치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n=278$) 중 다수(61.0%)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했다.⁸

최근 한미동맹은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1차적 목적이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과 북핵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해결하지 못했고, 나

<그림 3> 한미동맹의 필요성⁹ (단위: %)



8.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20.3%),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13.0%)의 순이었다. 한편으로,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n=660$)는 34.8%가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그 이유로 손꼽았고, 한미 FTA 등의 경제적 혜택(25.6%), 일본의 군사력 확장(19.9%) 때문이라고 본 비율이 뒤를 이었다.

9.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3월 16~18일).

아가 역내 군비경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다수 한국인의 태도는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역내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경제

적 부담도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측이 다수였다. 이는 한국인이 향후 중국의 부상 등을 포함한 지역 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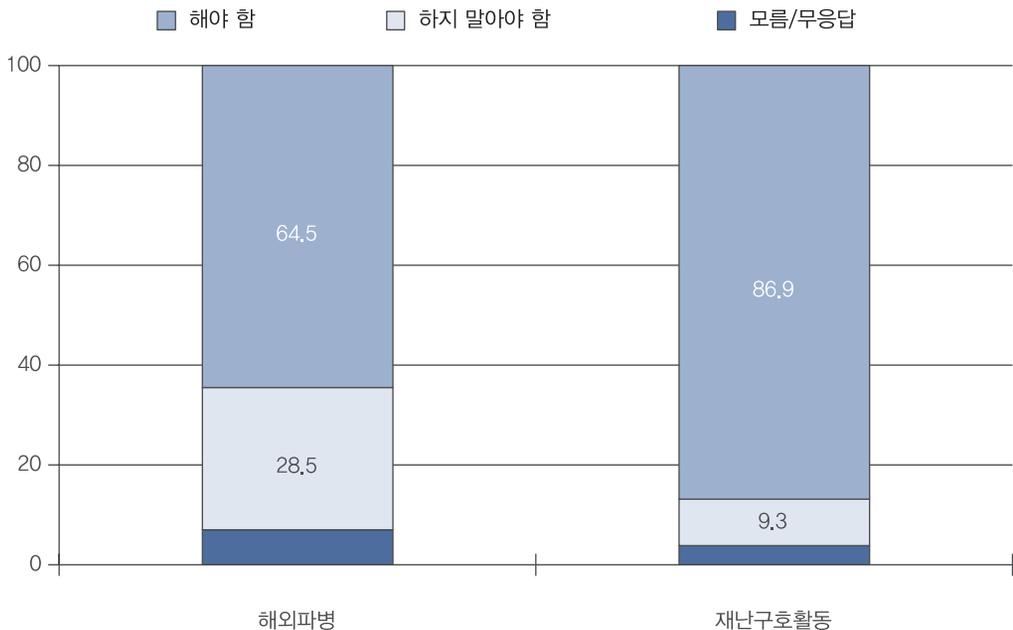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이 66.0%로 높았던 사실은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안보차원에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군사 안보 동맹으로 여긴 한미동맹을 이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묻은 문항에도 ‘한미동맹이 지역 안보를 위한 군사동맹’이라는 의견(48.8%)과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포괄적 동맹’이라는 의견(43.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상당수의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해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외파병이나 재난구호활동을 요청하면 동참해야 하는지를 각각 물었을 때, ‘해외파병을 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은 64.5%로, ‘재난구호활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은 86.9%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동안 해외에 파견된 우리 군이 재난구호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

-
10. 같은 설문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한 한국인의 비율이 높았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묻은 결과, ‘한반도 지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가 41.8%로 가장 높았고, ‘테러 억제 등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가 30.8%, ‘북한의 도발 억제 역할만 해야 한다’가 21.3%의 순이었다. 한국인 사이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같은 제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지역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에 재난구호활동 동참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파병에 동의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¹⁰ 그 이유는 우리 군이 중동(이라크, 아프가니스탄, UAE), 아프리카(남수단) 등지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동참했거나 활동을 지속할 때에도, 해외파병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며 정파 간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논의되었던 것과는 달리, 많은 한국인이 우리 군의 해외파병을 찬성하고 있었다.

〈그림 4〉 우리 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우리 군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파병 요청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비율은 통일 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 중에서 75.4%로 나타나, 통일 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 비율(54.3%)에 비해 21.1%나 더 높았다(〈표 2〉 참조).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본 한국인이 한미동맹 내 우리 군의 역할 확대에 더 긍정적이었다.

〈표 2〉 통일 이후 한미동맹 입장별 우리 군의 역할 확대 지지¹¹ (단위: %)

미국의 요청에 동참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필요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해외파병	75.4	54.3
재난구호활동	93.2	82.8

한미동맹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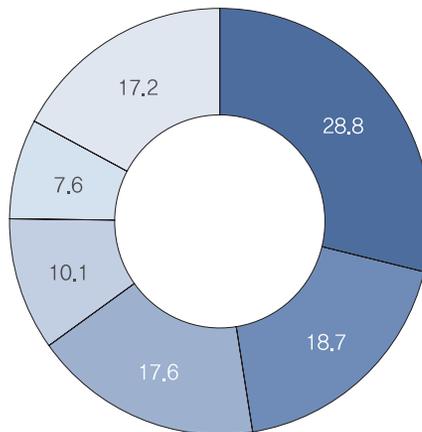
한미동맹의 확장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는 전작권 전환, 미사일 방어 체제, 원자력협력협정,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있다. 산적한 한미동맹 주요 이슈 중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전작권 전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28.8%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답했고, 미사일 방어체제가 18.7%,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위비 분담금(10.1%), 주한미군기지 이전(7.6%)의 순이었다(〈그림 5〉 참조).¹²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는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를 이유로 미국에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청했다. 현재 전작권은 2015년 12월에 우리 군에 이양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삭감으로 국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미국이 전작권 환수 연기 논의에 선불리 나서지 않았고, 기존 방침대로 우리 군에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

11. 〈표 2〉에 제시된 수치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미국의 해외파병이나 재난구호활동 요청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며, 각 문항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만을 분석한 결과이다.
12.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당국자 사이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3개월마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용 후 핵폐기물 재활용, 원전 연료 안정적 공급,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의 주요 쟁점 중에서도 최대 관건은 사용 후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지의 여부이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여파에 따라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 그러나 최근 4차 핵실험 예고, 미사일 발사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자,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한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¹³ 이렇게 한미 양국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한국인 10명 중 약 3명이 전작권 전환을 주요 현안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 한미동맹 주요 이슈 (단위: %)



전작권 전환 다음으로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가 주요 이슈로 손꼽힌 것은 다소 의외이다. 지난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 수준(알고 있다: 47.3%, 모른다: 50.9%)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⁴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에 지속해서 미사일 방어체제 동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문제와 미사일 방

13. 동아일보. (2014),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대…주한美사령관 ‘적절 시기 협의중’”, 2014년 4월 5일자.

14. 아산데일리포(조사기간: 2013년 5월 23~25일).

어체제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일부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꺼리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한국형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체제(KAMD)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미군의 주둔 및 운용 문제(17.6%)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7.6%)를 합하면, 25.2%가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는 전작권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비율(28.8%)에 육박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미군 주둔과 이에 따르는 관련 사회문제 등이 오랫동안 이슈가 됐고, 현재에도 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 비율은 10.1%로 낮았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정과정에서 분담금 규모와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일단락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 줄어든 것으로도 보인다.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한미관계에 있어 위험요소는 없는 것일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관계의 가장 큰 약점은 한미관계를 불평등관계로 보는 국내 여론에 있었다. 다수인 64.9%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SOFA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양국 관계가 불평등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관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분석결과, 미국 호감도가 높았던 50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평등하다고 보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국 호감도가 낮았던 30대와 40대는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각각 85.9%와 76.3%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과 함께 미국 호감도가 높았던 20대는 한미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본 비율이 72.0%로, 한미 간 불평등 문제에서는 오히려 30~40대의 의견에 가까웠다. 20대의 경우 현재 높아진 안보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미관계를 불평등 관계로 보는 편이었다. 청년층과 3040세대에서 한미관계를 불평등 관계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 심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대의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향후 한미관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이념성향, 정파성에 따라서도 달랐다. 보수, 새누리당 지지층보다는 진보(77.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8.6%), 무당파(79.5%)가 한미

〈표 3〉 세대별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¹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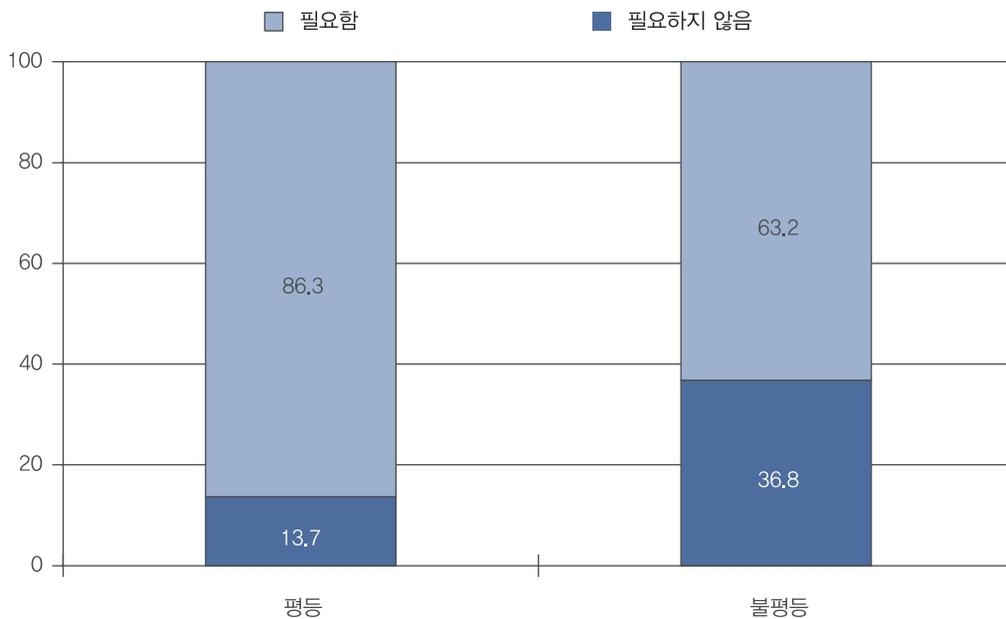
구분		불평등	평등	모름/무응답
전체		64.9	30.1	5.0
연령별	20대	72.0	26.1	1.9
	30대	85.9	14.1	0.0
	40대	76.3	21.7	2.0
	50대	58.1	37.9	4.0
	60세 이상	30.4	52.6	17.0
이념성향별	진보	77.4	21.2	1.4
	중도	68.5	27.7	3.8
	보수	58.2	37.8	4.0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2	49.4	6.4
	새정치민주연합	78.6	19.9	1.5
	무당파	79.5	13.5	7.0

15. 아산데일리리플(조사기간: 2014년 3월 16~18일).

관계를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으로 대미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념,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불평등 인식에 따라 한미동맹,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봤다.¹⁶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일수록 한미동맹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86.3%)고 봤다.¹⁷ 이는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볼수록 동맹유지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부담(예: 방위비 분담금, 주변국과의 갈등 등)을 동맹유지를 통한 편익보다 크게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한미관계 인식별 통일 이후 한미동맹 필요성 (단위: %)



16.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3월 16~18일).

17. 한미관계 인식에 따른 한미동맹 필요성 평가는 경제적 부담이 늘더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묻은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통일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 향후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격차가 덜했다(필요함 평등: 93.5%, 불평등: 82.7%).

다만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여긴 측에서도 통일 이후에 여전히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63.2%로 높았다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 인식이 가까운 미래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많은 한국인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관계를 불평등으로 여기는 한국인이 많았고, 이러한 점이 향후 동맹관계에 있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국자 간 동맹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욱 세련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에 따른 양국 협력에 대한 평가 격차는 한미 FTA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도 발견됐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본 비율이 42.9%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35.4%로 그다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답한 한국인 사이에서만 유지됐다.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만이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다(67.8%)고 봤다(〈표 4〉 참조). 반면에 한미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본 한국인 사이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평가가 52.3%로 가장 많았다.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평가는 39.6%로 그 다음이었다. 한미관계 인식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표 4〉 한미관계 인식별 한미 FTA 평가 (단위: %)

한미 FTA 평가	한미관계 인식	
	평등	불평등
한국에 더 이익	11.6	3.4
미국에 더 이익	16.9	52.3
양국 모두에 이익	67.8	39.6
양국 모두에 불이익	3.7	4.6

요약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양자 사이에 있어 동맹 간 필요성 인식과 공조 움직임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달리, 과반이 넘

는 한국인은 한미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인식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 관계

2014년 현재 동북아 정세는 미중의 패권경쟁과 북핵 문제, 주변국 간의 과거사·영토 문제와 군비 경쟁이 가속되며 풀기 어려운 매듭과 같은 상태에 빠져있다.¹⁸ 이 지역이 크림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로 손꼽히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¹⁹ 또 많은 전문가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추락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 리더십 회복의 기회 역시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 신뢰성 제고와 재확인,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이들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헤이그에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대해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성사 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됐다고 보다는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미국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중 대결

18. 중국은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8,082억 위안(약 141조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고, 일본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을 4조 8,800억엔(약 51조 1,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확보까지 노리고 있다.

19. 조선일보. (2014). "세계 추세 역행하는 동북아 군비 경쟁", 2014년 3월 6일자.

구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떠할까? 또 미국이 한일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 순방에 앞서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와 안보협력: 미국과 중국

동북아 정세가 급박한 만큼 한국인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구도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도 한국인의 84.2%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²⁰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모두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은 이들이 역사갈등과 반일감정에 앞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해 힘쓰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경제·군사 전 분야에서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이다. 대다수 한국인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70.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중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중 한미일 안보협력(57.1%)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한중 안보협력: 29.8%).

안보 측면에서 중국보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중국이 불편해하더라도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53.4%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1.7%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²¹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될 경우 미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9%였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였다(〈표 5〉 참조). 안보에 있어 한국인은 중국보다 미국을

20.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3월 13~15일).

21.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3월 7~9일).

신뢰하는 편이었다.

〈표 5〉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 (단위: %)

구분		비율
중국 견제 위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70.4
	반대	19.4
안보협력 프레임	한미일 안보협력	57.1
	한중 안보협력	29.8
한반도 안보	중국이 불편해도 한미동맹 강화	53.4
	한미동맹 약화해도 중국과 관계 강화	31.7
협력관계 강화 국가	미국	56.9
	중국	29.4

한국인이 여전히 미국과 중국 중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무게를 둔 이유는, 미국이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이라는 인식과 함께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협력에서 한계를 보였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 여론은 북핵 문제가 발발할 때마다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만을 취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체제의 안정을 더욱 우선시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2010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모습이나, 지난해 말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모습은, 한국인에게 중국과의 군사외교 분야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군사분야나 북한 문제에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한국인이 한중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에서는 일부 한국인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한 판단의 배경을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서 찾아본다.

한국인의 주변 정세 인식과 한미관계

위의 결과만 봤을 때 한국인은 동북아에서 부상하며 한국에 매우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 협력을 대체할 정도로 탄탄하다고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최대 우방인 미국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두 국가를 함께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미중 양국의 정치·경제부문 영향력 평가와 전망은 정책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된다.²²

한국인이 정치와 경제부문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러한 판단이 한미,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인은 현재 세계 각국 정치·경제 영향력 평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높게 보는 비율이 많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의 현재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정치(81.8%), 경제(64.7%) 두 부문 모두에서 매우 높았다. 절대다수가 미국의 현 정치적 영향력을 높게 꼽은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국이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5.2%, 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라고 답한 비율은 25.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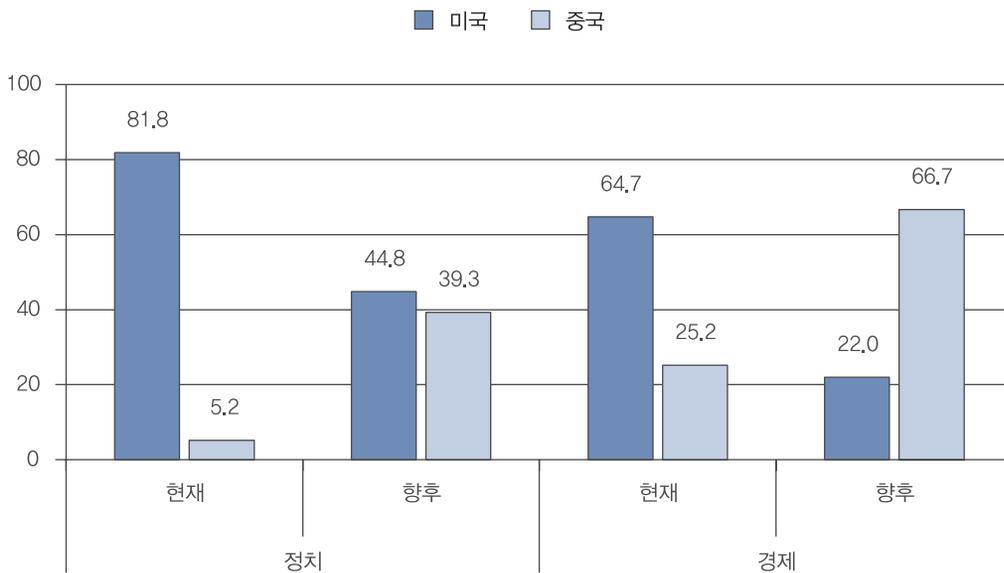
이러한 한국인의 인식은 향후 국가 영향력 전망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향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를 선택하게 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각각 44.8%, 39.3%로 두 수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인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경제 영향력 전망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다수의 한국인은 향후 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했다. 미국이 미래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

22.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3월 13~15일). 한국인의 강대국 인식은 정치, 경제부문별로 현재, 향후에 영향력이 높은 국가를 개방형 문항에 자유롭게 답하게 한 결과이다.

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2.0%로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 평가 수치와 비교하면 약 40% 이상 감소했지만, 향후 중국이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꼽은 비율은 66.7%로 절반을 넘었다. 많은 한국인이 향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7〉 한국인의 강대국 인식 (단위: %)



한국인의 현재와 향후 강대국 인식이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함께 한국인이 생각하는 협력해야 하는 국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이 가속화되고, 올해 양회(兩會)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친다면 향후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최대 변수가 중국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다수 한국인이 여전히 미국에 높은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한국인의 마음이 중국 측으로 기울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다음에서는 한국인의 향후 미중 영향력 전망 인식에 따라, 실제 안보협력 국가 선택과 미중 갈등 양상에서의 협력국가 선택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향후 국가 영향력 평가와 협력대상

앞서 언급한 대로 다수의 한국인(57.1%)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중 안보협력(29.8%)에 비해 선호했고, 미중 간 대결구도가 지속한다면 중국(29.4%)보다는 미국(56.9%)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표 5〉 참조). 하지만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선호 경향은 응답자의 강대국 인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향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 응답자는 안보 협력 대상과 협력국가 선택에 있어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표 6〉 참조). 반면,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 사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보다 한중 안보협력(42.9%)을, 미국보다 중국(49.3%)을 협력대상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중국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미국 대신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선택해, 상당수의 한국인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향후 국가 영향력 평가별 협력대상²³ (단위: %)

		향후 정치적 영향력		향후 경제적 영향력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안보협력 프레임	한미일	72.3	57.1	78.7	60.8
	한중	27.7	42.9	21.3	39.2
협력대상	미국	77.1	50.7	88.7	57.2
	중국	22.9	49.3	11.3	42.8

같은 경향이 경제적 영향력 전망에 따른 안보협력 프레임, 미중 갈등 상황에서 협력해

23. 〈표 6〉에 제시된 수치는 향후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응답지 없이, 미국과 중국을 답한 응답자 중에서 안보협력 프레임, 협력대상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각 문항의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만을 분석한 결과이다.

야 할 국가 선택에서도 나타났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사이에서도 중국을 안보협력이나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이 각각 39.2%와 42.8%로 전체보다 10%가량 높았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한 한국인일수록 중국과의 협력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한미동맹에 당장 큰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미 안보협력에서 불안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함께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한국인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인의 입장 변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크지 않은 균열일지 몰라도, 미국과 한미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한국인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이다. 미중 대결구도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안보 안 전망이 위태로워질 때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향후 한국인이 협력대상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국가 호감도나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를 봤을 때, 한국인은 향후에도 미국이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는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러한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갈등과 미국의 역할

동북아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한미관계 주요 현안에는 한일 갈등 문제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 불안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일관계가 파국에 이르지 않게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와 군사력 증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인해 반일감정이 반미감정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78.9%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한국인의 53.8%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표 7〉 참조).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 역할론에 동조한 응답자 중 57.6%가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불만이 더욱 크다는 점이었다. 이들 중 76.6%가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일 갈등에 대한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인($n=538$) 중 42.1%는 그 이유로 양국 간 갈등을 방치해서, 38.1%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서라고 답했다. 미국이 지난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지지한 모습이나 일본 아베 총리와 같은 우익 정치인들의 과거사 도발에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인 것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미국 역할론 입장별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 평가 (단위: %)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 평가	한일관계 개선 미국 역할론		
	전체	동의	동의 안 함
		78.9	16.3
긍정	34.8	42.4	23.4
부정	53.8	57.6	76.6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에 아쉬움을 갖는 한국인의 의견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인 사이에서 미국이 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응답은 32.4%였던 반면, 일본이라고 답한 응답은 53.0%였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사이에서 더 두드러졌다. 미국의 중재역할에 만족하지 못한 응답자 중 76.7%가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일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거나, 한국보다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은 최근 미국의 행보가 일본 측에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듯

〈표 8〉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별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 (단위: %)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	한일 갈등 미국 대응 평가		
	전체	긍정	부정
		34.8	53.8
한국	32.4	53.1	23.3
일본	53.0	46.9	76.7

하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교당국에서도 주의하고 있다.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뒤늦게 한국이 포함된 것도 국내 여론과 외교 정세를 의식한 당국의 조치 때문이었다.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중요시하며,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일본에 경도된 미국의 태도와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실패하는 듯한 모양새가, 일본을 꺼리는 한국인을 중국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실망: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중국

실제 미국이 중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한국인은 안보협력이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국가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택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한일갈등에 있어 미국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9.2%가 안보협력에 있어 한중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표 9〉 참조). 이는 미국이 중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28.3%만이 한중 안보협력을 선택한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이 같은 경향은 미국의 한일관계 대응 평가에 따라,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반이 넘는 한국인은 미국을 택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미국이 한일갈등을 잘 중재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76.1%는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국가에서 미국을, 23.9%가 중국을 선택한 것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 58.8%가 미국

을, 41.2%가 중국을 택했다. 한국인은 미국이 한일갈등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록 중국과의 안보협력, 중국과의 협력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

〈표 9〉 미국의 한일 갈등 대응별 협력관계 인식 (단위: %)

구분		한일 갈등 미국 대응 평가	
		긍정	부정
안보협력 프레임	한미일 안보협력	71.7	60.8
	한중 안보협력	28.3	39.2
협력관계 강화국가	미국	76.1	58.8
	중국	23.9	41.2

또한, 미국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 집단에서도 안보협력 프레임 선택 및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국가 선택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의 78.7%가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택했고,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21.3%로 낮았다. 반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57.8%가 미국을 택했고, 무려 42.2%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을 중요한 협력상대로 여겼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했지만, 협력상대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는 변화가 일부 감지된 점과, 한일갈등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한국인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더욱 세련된 외교술을 보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미관계가 깊어진 만큼 한국인이 미국에 요구하는 역할은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많은 한국인이 해외파병 요구와 같은 한미동맹에서의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동북아 내에서 갈등을 중재하며 평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안보공약에 신뢰를 보이면서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더 협력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표 10〉 미국의 중요 파트너 인식별 협력관계 강화 국가 (단위: %)

구분		미국이 중요시 하는 국가	
		한국	일본
안보협력 프레임	한미일 안보협력	71.9	62.4
	한중 안보협력	28.1	37.6
협력관계 강화국가	미국	78.7	57.8
	중국	21.3	42.2

나가며: 한미관계의 미래

한미관계는 지난 60년간 진화해 왔다. 안보동맹에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변모했다. 이에 맞춰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역시 발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인의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다. 80%가 넘는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의 협력상대라고 답했다. 다수의 한국인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봤고, 미국의 해외파병(64.5%) 요청과 재난구호활동(86.9%) 동참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동맹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성숙해졌다. 하지만 긍정적 인식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양국 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미관계가 과거 일종의 ‘주-종(client-patron) 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화했음에도 아직도 다수의 한국인이 양국관계를 불평등하

다고 생각했다.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본 한국인의 인식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과거 SOFA 개정 문제, 주한 미군 이전 문제,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에서 불거진 양국 간 갈등으로부터 불평등 인식이 촉발됐으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불평등 관계에 있다고 본 다수의 한국인은 한미동맹이나 한미 FTA 등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현안에서 그렇지 않은 측에 비해 미국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올해에도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많은 사항이 남아있다.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한다. 이는 양국 간 협의 과정을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부상이다. 한국인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미국을, 향후 가장 영향력이 있을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락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미국 대신에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인 사이의 이러한 우려와 중국에 대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관된 동아시아 정책을 펼쳐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상당수의 한국인이 향후 중국이 무너진 미국의 리더십을 딛고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동맹국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흔들리는 한국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동맹과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한일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다. 대다수 한국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다는 점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일관계에서 미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인의 평가는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점은, 한편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사 도발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역사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이 바라는 3자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도 잃게 될 것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향후 한일 갈등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보다 역사와 정의의 시각에서, 또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²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핵 문제로 야기된 안보 불안에 한미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줄 것에 대해 요구하는 입장이다. 전략적 인내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입장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말 한미일 정상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자리를 마주했다. 동북아 내 주요 동맹국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없는 미국의 주도하에 정상회담이 치러졌다. 기대와 달리,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도 양국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6자회담에 대한 어떤 방안도 도출되진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높아진 기대를 실현하고, 동북아 내 증대된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하면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한일

24. 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서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이슈로 한국인은 북한 핵문제(26.5%)를 꼽았지만, 경제(한미 FTA 등 경제협력 강화: 19.8%)나 통일 이슈(통일 위한 협력: 16.7%)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또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갈등 중재를 중요 사안으로 꼽은 비율도 13.2%로 나타났다.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한미관계 주요 이슈

2013년

3월 18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북핵 대응책 논의)

3월 25일: 박 대통령,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

(북한 핵보유 용인 불가 입장 표명)

3월 29일: 박 대통령, 밥 코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간사 접견

(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 논의)

4월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미(일본·북한 문제 협의)

국방부,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추진 업무보고

4월 12일: 박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접견(일본·북한 문제 협의)

4월 18일: 제37차 군사위원회 회의(전작권 전환, 북핵 문제 논의)

5월 5~10일: 박 대통령 방미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6월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 논의

6월 28일: 미 하원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연장안 발의

7월 30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8월 19일: 박 대통령,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접견

(북핵 문제, 한일 안보협력 논의)

9월 17일: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연장안(H.R. 2449) 미 하원 통과

9월 30일: 박 대통령,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접견(전작권 전환, 북핵 문제 논의)

10월 2일: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전작권 전환 조건, 시기 재검토 협의)

11월 25일: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사령관, 한강 이북 미군 일부 잔류·한미연합사단
창설 검토

12월 6일: 조 바이든 미 부통령 방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 논의

12월 11일: 주한미국지휘협정(SOFA) 대표 회의, 주한미군 영외순찰 규정 개정

2014년

1월 12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1월 27일: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연장안 미국상원의회 통과

2월 2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정식 서명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한일관계 개선 논의)

한-미 주요 협정 및 계획 일정

- 전작권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
-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공청회
- 한미원자력협력협정(The 123 Agreement)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일정

2013년 7월 2일: 워싱턴, 제1차 고위급 협의

2013년 7월 24~25일: 서울, 제2차 고위급 협의

2013년 8월 22~23일: 서울, 제3차 고위급 협의

2013년 9월 25~26일: 워싱턴, 제4차 고위급 협의

2013년 10월 5일: 인천, 제5차 고위급 협의

2013년 10월 30~31일: 서울, 제6차 고위급 협의

2013년 11월 18~19일: 워싱턴, 제7차 고위급 협의

2013년 12월 4일: 워싱턴, 제8차 고위급 협의
 2013년 12월 10~17일: 서울, 제9차 고위급 협의

2014년 1월 9일: 서울, 제10차 고위급 협의
 2014년 1월 12일: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 방위비 분담금 총액 9200억 원
- 유효기간 2018년까지 총 5년,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음
-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양국 간 사전 조율 실시,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 강화,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 보고서 작성하여 한미통합국방협의회에 매년 4월에 보고, 이를 위해 미국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를 연 2회 우리 측에 제공,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협의

2010년 10월 25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1차 협상 회의

2011년 3월 3~4일: 서울,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2차 협상 회의

2011년 7월 14~15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3차 협상 회의

2011년 12월 6~8일: 서울,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4차 협상 회의

2012년 2월 6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5차 협상 회의

2013년 4월 16~18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6차 협상 회의

2013년 6월 3~4일: 서울,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7차 협상 회의

2013년 9월 30~10월 1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8차 협상 회의

2014년 1월 7~8일: 워싱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9차 협상 회의

- 원전 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별도 문서로 채택
- 재처리와 농축 문제는 근본적인 입장차로 인하여 큰 진전은 없음

2014년 1월 27일: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연장안 미국상원의회 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

2013년 5월: 제17차 TPP 협상

2013년 6월: 일본 교섭 참여 승인 여부 결정

2013년 9월: 일본 포함한 12개국 제18차 TPP 협상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기본안 합의

2014년 1월 10일: 박 대통령, TPP 공식 참여 희망

2014년 2월 25일: TPP 최종 합의 도출 실패

2014년 3월 4일: 한국-일본, TTP 예비양자협약 개시

2014년 3월 10일: TPP 1차 예비 한일 양자협약

2014년 5월: TPP 재협상 추진

부록 2

조사개요

아산연례조사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9월 27일

아산데일리폴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SAN REPORT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발행일 2014년 4월 21일

지은이 최강,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050-1 93300 비매품



9 791155 700501 비매품
ISBN 979-11-5570-050-1